

< 첨부: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>

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

2018. 3. 22 (목)

— < 목 차 > —

I. 현황 및 문제점	1
II.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	2
III.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	7

관계부처 합동

I. 현황 및 문제점

□ 산업단지는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와 관리, 노후화 등으로 인해 창업과 혁신역량, 편의·복지시설 등이 부족

* '17.9월 기준, 산업단지는 1,176개이며, 9.5만 입주기업에 217만명이 근로하며,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%, 수출의 75%, 고용의 50%를 담당('16)

*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(개): ('17) 91개 → ('18) 135개 → ('22) 278개

○ 현재 산단에는 청년인력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고, 특히 젊은 20~30대 근로자들의 인력 미스매치가 큰 상황

* 산업단지 근로자 비중('16) : (15~29세 수요) 17.9% > (공급) 13.9%, △ 4.0%p
(30대 수요) 47.3% > (공급) 33.8%, △13.5%p

□ 젊은이들은 지식산업·IT 등 신산업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높고, 비전이 있는 첨단산업과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

* 15~29세 근로자 비중: (산단, '14) 13.9%, (전체산업, '16) 17.6%, (IT, '16) 23.2%

○ 일자리카라반*, 일자리현장점검반을 통해서도 근로자들은 도로·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, 깨끗하고 쾌적한 근로·정주환경을 요구

* 기재부·노동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·차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20개 산단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체험,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경청('17.10.12~11.8)

□ 청년들은 산업단지에 공장과 영세기업들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, 도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하다고 인식

☞ 향후 3~4년간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을 감안, 청년이 가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단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

II.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방안

1 기본방향

① **(추진방향)** ①활발한 창업과 ②기업의 혁신역량 확충, ③우수한 근무·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청년들이 가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

* ①청년창업 입지 및 지원시설 확충, ②신산업 창출 및 기업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, R&D, 산·학연 협력 강화, ③도시 숲, 어린이 집, 문화·체육시설 등 유치

- ①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유치 촉진, ②정부재정 투입 확대
- ③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·정주환경을 조성

② **(맞춤형 지원)** 산업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,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산업단지에 집중 지원

< 산업단지 유형별 수요 맞춤형 지원방향(예시) >



③ **(성공모델 창출)** 조기에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선도 산업 단지를 선정하고, 집중 지원하여 성공모델 확산 추진

- 금년 중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 후 매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'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2

주요 추진과제

◇ 규제완화, 재정투입 확대를 통해 산단에 창업·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, 지자체와 협업하여 산단별 맞춤형 근로·정주환경 개선 지원

* '18년 산업부의 산단 지원 8개 사업예산(억원): 1,328억원 + α (협의중)

◇ 금년 중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 한 후 매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'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1 [창업 생태계] 산업단지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메카로 조성

○ IT·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유치,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*를 통한 지식산업센터(舊아파트형 공장)를 대폭 확대**

* ①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 확대(20%→ 30%~50%), ②임대사업자의 임대 허용(현행 센터 건립자만), ③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

< (사례) 초기 창업자들의 임대공간 부족 >

【사례1】 광주테크노파크 B센터 6년 보육기간을 마친 기업이 임대료가 낮은 산단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공간을 물색했으나, 임대공간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함

【사례2】 서울디지털산단 내 창업자 전용 임대공간인 'G밸리 테크플랫폼'은 저렴한 임대료(월30만원)로 입주 경쟁률 치열(평균 경쟁률 1:5~6)

*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확대:
(17) 594개→ (18) 685개→ (22) 1,100개 목표

< 지식산업센터 내 창업기업 입주현황 >

- 지식산업센터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('18.1), 창업기업 입주비율은 20~60% (서울 A센터 62%, B센터 44%, 지방 C센터 35%, D센터 29%)
- 지식산업센터 내 IT·지식산업 등 지식서비스업종 입주비율이 40% 차지

- 산단 관리기관이 휴·폐업* 공장과 부지를 매입 후 기업수요에 맞도록 리모델링하여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게 공장 임대 추진

* 국가산단 내 휴·폐업 공장면적은 1,185,958㎡(358천평), 3년 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

-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창업 교육 실시 및 세무·컨설팅 제공 등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

* 창업교육.세무.법률.마케팅.수출 관련 컨설팅 제공(기업성장지원센터 7곳, 72명)

- 우수인력과 연구자산을 갖춘 지방대학에 「캠퍼스형 산학융합 지구」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*을 검토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

*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 기업연구소(산·학 공동 R&D, 인턴십 운영 등), 현장밀착형 육성센터(도시형공장) 구축 추진

- 청년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* 하고,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메이커 스페이스도 구축

* 공장부지 최소면적기준(900㎡) 폐지, 창업기업 등 산단 입주 우선권 부여

② [혁신 생태계]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선도

-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으로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를 양성 하고 고용으로 연계시키는 한편,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

-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설치하여 산·학간 '인력 양성-공동R&D-고용'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확대

* 「산학융합지구」 조성완료: ('17) 7개→ ('18) 8개→ ('22) 15개 목표

프로그램	내 용
맞춤형 인력양성	프로젝트 LAB, R&D 인턴십 등 기업수요에 기반 한 교육과정
중소기업 기술지원	교수, 기업연구원 등이 협업, 산학 공동 R&D, 기술애로 해소
근로자 역량 강화	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, 일·학습 병행 지원 등

< 산학융합지구 일자리 창출 성과('13~'17.9) >

- 산단 이전캠퍼스는 20개 대학, 41개 학과, 7,580여명, 이중 **1,596명**이 공동 산·학 협력과제(프로젝트LAB 등)를 수행했던 **기업에 직접 취업**

- 산·학·연이 함께 '제품기획- R&D-생산-판매'를 공동으로 하는 **비즈니스 협력모델**을 구축 및 확산('18년 591억원, Mini-Cluster(MC))

* MC비즈니스 협력모델 구축: ('18) 92개→ ('18) 110개→ ('22) 300개 목표

<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 성과 사례 >

- 전북 특장차기업(군산농공MC소속 29개사)들이 'e-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 협동조합'을 구성,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사업화 성공으로 **358억원 매출 발생**

- **쾌적한 작업환경 조성**과 **생산기반 혁신 지원**을 위해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**스마트공장을 거점국가산단에 집중 보급**

* 스마트공장(전체, 누적): ('17) 2,550개→ ('18) 3,700개→ ('22) 13,000개 목표

- **기업 혁신역량 확충**을 위해 창업보육·R&D·시험인증기관 등을 집적화한 **혁신지원센터**를 구축하여 **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** 제공

* 혁신지원센터 구축(누적): ('17) 6개→ ('18) 7개→ ('22) 11개 목표

- (예: 창원) 기업지원센터, 화학시험연구원, 특허.세무.회계.마케팅기관 등 입주

- 산단에 「**혁신성장촉진지구**」를 지정('19년 2개소), **벤처·창업기업**을 집적*하고, 우수한 환경 조성을 위해 **공원과 문화·편의시설도 설치**

* 토지이용 규제완화+세제혜택+지원프로그램 우대로 환경 친화적 혁신공간 조성

- 벤처기업, R&D 지원기관, 연구소, 미니공원, 도시 숲, 편의.지원시설 등 설치

- 서울디지털산단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, 개발이익 재투자 및 재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개편 추진 (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)

3 [근로·정주환경] 산단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근로·정주환경을 개선

◇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의 현장수요를 반영, 산업단지 지원 관련 정부사업들*을 산단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**

* (산업부)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, (고용부) 어린이 집, 통근버스·기숙사 지원 등, (문화부) 개방형 체육관 등, (국토부) 배후지역 임대형 행복주택 등

** (선정절차) 지자체가 사업수요를 패키지 제출→ 관계부처 합동심사·평가→ 지원

○ 적극적인 제도개선*을 통해 청년 선호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여 젊은이들이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기도록 지원

* ① 일부업종(카지노, 단란주점 등)을 제외하고 PC방, 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로이 허용, ② 민간투자 촉진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투자자들의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합리화 → 산업·지원시설 동시 입주 가능한 복합구역 확대 ('17년 1개→ '18년 3개→ '19년 8개)

○ 출·퇴근 편의제고를 위해 무료 순환 통근버스*를 확대·운영하고, 교통·물류 원활화를 위해 도로·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·정비

* '18년 남동, 반월시화, 아산 등 무료 통근버스 운영에 12개소, 21억원 지원

○ 근로자를 위한 개방형 체육관('18년 5개소), 도시 숲을 조성하고, 노후산단 리모델링시, 공용 휴식처(공원·정원 등) 확보를 의무화**

* '18년 산단 인근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(15개소, 16억원, 잠정)

** 공원·쉼터 등 공개공지 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

○ 산단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수·반월시화 등 수요산단 대상으로 직장형 어린이 집을 확대

○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임대료**를 지원하고, 산단 인근 배후도시에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건립

* '18년 울산 미포 등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14억원 지원

III.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

1. 추진체계

- (추진체계)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으로 청년 친화형 산단 T/F를 구성·운영하여 선도 산업단지 선정
 - (구성) 10개 정부부처, 4개 정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·운영
 - * 10개 중앙부처.청(산업.국토.고용.문체.과기정통.중기.환경.교육.산림청+기재부) + 산단공.산업연.국토연·LH 등 4개 유관기관 등 총 14개 기관
 - (역할) ①선도 산단 선정기준 및 ②지역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 등 시행방안 마련, ③선도 산단 최종 선정 등
 - (절차) ①지자체 수요조사→ ②지자체가 패키지로 사업수요 제출→ ③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“수요검증-합동심사-평가”→ ④지원

2. 기대효과

- '18년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 2.4조원 이상 유치기 예상
 - * 지식산업센터(2.1조원) 및 복합구역 확대(0.13조원),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한 복합 문화센터 등 건립 확대(0.14조원 + α) 등
-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
 - '22년까지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규모는 대략 2.2만명으로 기대 (산업연·입지연 추산)